

마음이 아픈 학생입니다. 나쁜 학생이 아닙니다

교수칼럼

백종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대학생 정신건강이 위기라고 한다. 실제 5년 사이에 우울증 진료 인원이 20대에서 2배로 늘었다. 다른 연령과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만 그런 것은 아니다. 타 선진국의 우울증 유병률은 한국의 2배 이상이다. 현재 20대가 가지는 어려움은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르다. 산업화, 핵가족화 등의 변화는 20대 우울증 유병률을 높여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것이다.

2007년 경희대학교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그해에만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온 6명의 본교 학생들을 만났다. 스트레스 요인은 성장 과정의 트라우마, 학업, 취업, 대인관계와 이성관계 등 매우 다양했다. 우울증과 적응장애, 조울증 등 여러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은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이유는 ‘알고도’ 또는 ‘몰라서’였다. ‘몰라서’는 고통을 스트레스상황에 따른 것으로 생각했지, 질환으로 인한 고통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알려준 바 없었기 때문이었다. ‘알고도’는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불이익에 대한 염려와 편견의 장벽을 넘지 못한 것이었다. 실제 이들은 교수님과 동료에게



사회적 편견의 장벽이 높아 정신건강을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사진 = 중앙일보 DB)

어려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업에 의지가 부족하거나 책임감이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게 되자, 입을 닫고 있다가 극단적 시도를 한 것이다. 아픈 학생들이 나쁜 학생들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 외부 편당을 통해 한 명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두고 2008년 대학생우울증지원센터를 열었다. 전화상담, 방문상담을 시작했고 23명의 학생에게 정신건강평가를 제공했고 상담으로 충분한 경우는 학생상담센터로 안내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본원 또는 주변의 클리닉으로 연계하고 지원했다. 문화제와 영화제 등 이벤트로

정신건강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보려 했다. 2009년 이후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면서 이월했다.

그때 한 세미나에서 어느 교수님으로부터 외국의 사례를 듣게 되었다. 미국유학 중 예정에 없이 빨리 아이를 출산하게 된 그는 학업과 육아부담에 너무나 힘들었다고 한다. 점점 잠이 오지 않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었다.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고 극단적인 생각마저 드는 상황에서 학교상담센터를 찾았다. 상담센터의 벽에는 커다란 글씨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라고 적혀있었다. 해당 글을 보니 눈물

이 났다고 한다. 심리 전문가, 정신과 의사는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도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과도한 책임감에 공감해주었다. 그들은 “당신은 ‘치료’가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는 물음에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떠올라 급하게 도움을 청했다. 그 결과 위기를 잘 넘기고 현재는 한국에 돌아와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얘기였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자살예방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있다. 실제 1998년 자살예방을 국가적 과제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자는 미 의회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대학생 자

녀를 자살로 잃은 부모들이 만든 민간 자살예방재단의 노력이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결과였다. 미주한인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에스터 하 재단’도 비통한 딸의 상실을 애도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와 같은 비극을 겪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의 기부로 시작됐다.

국내에서도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학부생 전수 정신건강 온라인검사’에 따르면 휴학과 성적 저하와 가장 관련 있는 지표는 우울척도였다. 서울대학교는 학생상담센터와 보건진료소의 정신과 진료를 강화했다. 여러 학생들의 안타까운 자살이 이어졌던 카이스트를 비롯한 전국의 과학기술대학은 모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여 상담센터와 함께 상담, 치료, 사후개입과 예방을 진행하고 있다. 경희대학교의 상담시스템도 온라인 예약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고 유학생의 치료와 상담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편견의 장벽이 높다면 무용지물이다.

미국 연수 중 정신과에 진단서를 받으러 온 몇몇 대학생이 있었다. 그들은 취업 면접을 위해 진단서를 요구하며 “미국은 우울증이 있었는데 현재 극복했다는 진단서가 있으면 오히려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정신건강 문제는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다. 이제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오해받지 않고 언제나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교수사회의 변화를 위해 - ⑥

교수의 총장선출 권한 박탈과 교수선발권 이양



김종인(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김종인 교수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학 내부의 불합리를 절실히 체험했다고 말한다. 그는 내부자이자 관찰자로서 간간 직접 보고 겪은 문제들을 알리기 위해 칼럼을 연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총 6회 분량의 연재가 계획돼 있다.

※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인대학원생제도와 국가공인 박사제도가 정착되면 장기적으로 대학교수 선발에서 유능한 학자가 배제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가 갖추어지더라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한다. 그 때까지 대학을 지금의 교수 길드의 손아귀에 두게 할 수는 없다. 교수 길드를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한 조치들부터 취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사실상 교수들의 손에 의해 총장이 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교수들은 대학의 주인이 아니다. 교수들이 단독으로 혹은 교직원과 결탁하여 총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노동자조합에서 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출한다는 것과 같다. 이것은 사회주의에서도 있을 수 없으며 윤리적으로 부당한 일이다.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영 논리상으로도 옳지 않다.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지 않은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그 회사의 운영상 일차적 관심은 회사 영업이익이 아니라 노동자들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회사는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투자나 기술개발 등에 노력을 기울일 수가 없게 되고, 나태하고 무책

임한 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장에서 도태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대학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교직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어서도 안 된다. 대학은 사회적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교수를 비롯해 대학에 고용된 사람들 손에 학교 운영의 수장인 총장이 선출된다면, 총장은 사회적 공익이 아니라 자신을 뽑아 준 교직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교직원들의 이익과 상충해 미래 지향적 교육을 위한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된다. 교수사회 길드체제의 저항만으로도 어려웠던 학과 통폐합 같은 일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대학은 사회적 요청과 무관한 구태의연한 교육만 이어가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교수 채용을 할 때 교내 교수들이 채용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교수들은 전문직 노동자로 고용된 사람이자, 하청을 받은 감독자들이 아니다. 학과 교수들이 교수선발권을 가지면서 생기는 앞서 거론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들이 가지는 교수선발권은 대학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과 부정의의 근원이다.

교수 선발의 과정은 학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맡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성된 심사위원회에는 채용 분야의 전공자들이 들어가야 하겠지만, 전공자들로만 구성해서는 안 된다. 전공분야 밖의 학자들이 들어가서 폐쇄적인 전공자 사회의 인적 관계에 의한 편파적인 심사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전공자들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한국 학계의 좁은 인적 바탕으로 인하여 결국 아는 사람 밀어주기 선발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 학계는 너무나 좁아서 전공자들끼리는 학계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특정 대학의 학교 교수들이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교수들 가운데서 심사자를 뽑아 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심사자들은 자신이 심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정은 한국의 모든 학술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에 응모한 연구의 선발심사에 들어 가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전공분야 외부의 위원들의 심사 능력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않다. 후보자의 연구능력과 강의 능력은 전공자들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문적 훈련이 된 사람이면 학

문 일반의 관점에서 연구실적의 질을 평가할 수 있고, 강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후보자와의 사적인 교류가 없었으므로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다.

또 교수 채용 심사위원회에는 학생위원도 반드시 참가시켜야 한다. 학생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훌륭한 교수가 선발되기를 바라는 이들이다. 영터리 교수가 선발되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이 학생들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이야말로 교수 채용에서 가장 큰 발언권을 가져야 할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학생들은 전문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사회 경험의 부족으로 후보자에 대한 심층적인 판단력이 부족할 수 있다. 그것이 우려된다면 학생위원들에게는 심사권은 주지 말고 관찰자로서만 참가하게 해도 된다. 학생위원이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심사위원들이 한통속이 되어 영터리 심사를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연재칼럼 목차〉

1. 강사법 시행과 총장 선출
2. 대학의 주인은 재단이나 교수가 아닌 사회
3. 대학교수들의 구시대적 권리 행사
4. 교수 길드의 전근대적 폐쇄성, 대학교육 낙후
5. 교수 길드의 해체를 위한 국가공인박사제도
6. 교수들의 관습적 권한을 폐기해야 한다